

# 문재인 전기 (1) :

## 故 이재수 전기무사령관을 추모하며 밝히는 문재인과 세월호의 관계

인권변호사 문재인은 돈을 가장 많이 버는 변호사였는데, 부산저축은행에서만 수십 억대의 수입료를 받아챙겼다. 문재인의 정치권력 밑천이 금권이고, 그가 돈 잘버는 변호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유병언 및 광주사태 주동자들과의 묘한 인연 덕택이었다.

다음 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자료는 김대령 저 아마존 신간 『[문재인과 전두환의 5.18 역사전쟁](#)』 1~9 쪽에서 발췌한 것이다.

제 1 장 · 세월호 참사 원인 제공자 문재인

1. 유병언과 문재인의 엇힌 관계

제 3 장 · 광주시민 쓴 5·18 유공자들

9. 5 월 27 일 새벽의 무장시민 사망원인

제 4 장 · 전두환과 문재인의 5·18 역사전쟁

6. 문재인이 바로잡아야 할 5·18 기록

나. [황석영의 가짜정보에 낚인 문재인](#)

다. [신동아 안영배 기자의 오보](#)

라. 사적지 순례 및 체험단의 허위설명

마. 『正史 5·18』의 허위기록

바. 월간조선의 5·18 보도 오류

아. 홍금숙의 위증과 황석영의 억측

자. [학살 누명 쓴 구조 활동](#)

제 6 장 · 무장공비 기관총 총성 들은 조비오 신부

2. [조비오 신부가 지어낸 헬기 사격 유언비어](#)

제 8 장 · 무장청소년들의 총기난사가 빛은 비극

1. [중흥동 청소년 총기난사 때 희생된 임산부](#)

2. [고등학생 총기오발사고 희생자 박금희](#)

## 제 1 장 · 세월호 참사 원인 제공자 문재인

도의적으로 문재인은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는 정치인이었다. 노무현이 김대중 정부 해양수산부 장관이었으며, 그래서 참여정부의 여러 정책들 중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잘 알고 직접 챙길 수 있었던 정책이 해양수산부 정책이었다. 세월호 선주가 유병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세월호는 청해진해운이 보유한 선박이었고, 청해진해운 최대주주가 유병언의 아들 유혁기와 유대균 등 유병언 일가였고, 유병언이 세모그룹 회장이었기 때문이다. 청해진해운은 김대중 정부의 해양정책 작품으로 1999년에 설립되었고, 김대중 정부 해양수산부 장관은 노무현이었다.

유병언은 김대중 정부로부터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 김대중이 유병언의 세모그룹에 어떤 특혜를 베풀었는지는 김대중이 다른 기업들에는 어떻게 하였는지 비교해 보면 드러난다. 1997년에 대우그룹은 아주 튼튼하고 건강하며 모범적인 수출기업이었다. 그 해 연말에 자금 회전이 잘 안되었던 이유는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에 대우가 자동차공장들을 지어 완공했기 때문이었다. 한국은 일본에 부품기술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 동유럽은 임금은 싸면서도 공업기술이 아주 발전된 국가들이었다. 따라서 일본에서 부품을 수입하여 조립하는 자동차 생산보다는 동유럽에서 한국이 부품을 생산하여 유럽 현지에서 자동차를 생산하여 수출하는 것이 생산 가격은 낮추고 기술은 높여 한국이 자동차 수출 강국으로 부상하게 하는 비결이었다. 그래서 대우가 체코 등에 건설한 자동차공장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확보하기 위한 투자였다.

김대중이 대우자동차가 동유럽에 건설한 자동차공장들을 그대로 놔두었으면 금방 한국은 자동차 수출 강국이 되어 국민 GNP는 팍팍 오르고, 한국은 온 국민이 먹거리 걱정 없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김우중 회장이 심혈을 기울여 지은 그 소중한 동유럽 공장들을 김대중이

## 문재인과 전두환의 5·18 역사전쟁

거저 주다시피 GM 에 넘겼을 때 이것은 단지 시설을 헐값에 매각한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우리 것이 되었던 동유럽의 첨단 산업과학기술을 헌신짝처럼 버린 문제였다. 동유럽의 황금 낚는 거위를 거저 얻다시피하는 횡재를 한 GM 이 한국의 대우자동차 공장을 인수하여 그 명칭을 한국 GM 으로 바꾸었으나, 소유권이 외국으로 넘어간 후의 한국 자동차 산업은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고 몰락하고 있다. 지금 한국은 정부 지원금으로 외국인 기업 한국 GM 을 연명시키는 모순에 빠져 있다.

그러면 왜 김대중이 한국인의 미래의 먹거리가 될 첨단 산업과학기술과 더불어 동유럽의 자동차공장들의 소유권을 지맘대로 경솔하게 GM 에 넘기는 바보짓을 하였는가? 그 이유는 김우중 회장이 껄썩죄에 걸렸기 때문이다, 김우중이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한국 경제 발전의 상징적 존재라는 것이 껄썩하다는 것이었다. 김우중과 대우그룹은 김대중의 박정희 지우기 희생양이었다.

1997 년 연말에 대우그룹은 망한 회사가 아니라, 외화를 콕콕 벌여오는 효자 수출기업이었으며, 막 동유럽 자동차공장들을 완공하고 새로운 도약을 하려는 아주 희망찬 기업이었다. 아주 좋은 전략적 판단으로 동유럽 자동차공장들을 세우다 보니 갑자기 닥친 IMF 환란 때문에 잠시 자금 회전이 잘 안 되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김대중이 대우가 확보한 동유럽의 첨단 산업과학기술을 한국으로 이전해 오지 않고 통째로 외국 기업에 넘겼을 때 그것은 한국의 자동차산업을 버린 것과 마찬가지로였다. 지금 한국 GM 을 정부 지원금으로 연명시켜 보았자 기술이 우리에게 남는 것도 아니고, '떡튀'만 거듭되고 있다. 최순영 회장의 신동아그룹도 아주 건실한 기업이었는데 김대중 일당의 공연한 껄썩죄에 걸려 해체되었다.

김대중은 대우와 신동아 등 한국의 모범적인 기업들을 아주 신속하게 해체하고, 경제발전 유공자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기업 소유권을 강탈해해 갔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세모그룹 회장 유병언에게는 아주 관대한 특혜를 베풀었다. 세모그룹의 소유주 유병언이 1997 년 3 천 673 억원의 부도를 냈을 때 세모그룹은 대우그룹의 자동차 및 전자제품 수출 노하우 같은 특징이 있는 그룹이 아니었고, 부도액수도 천문학적인데다 수익성 있는 뚜렷한 사업이 없었다. 그럼에도 김대중 정부는 유병언이 재기하고, 그의 세모그룹이 기사희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부도나서

법정관리에 들어간 세모그룹이 1999 년에 청해진해운을 설립하고 김대중 정부로부터 20 년 독점 항로를 따냈다. 갓 설립된 해운회사가 아직 배도 없었을 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여객항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은 김대중 정부의 해양수산 정책이 특정 기업에—이 경우 유병언 일가에—어떤 특혜를 주었는지를 시사한다.

## 1. 유병언과 문재인의 얽힌 관계

유병언은 IMF 위기, 이른바 외환위기 직전에 신세계종합금융으로부터 45 억원짜리 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려간 뒤 이를 변제하기는 고사하고 IMF 가 터지자 입을 씻고 안 갚았다. 즉, 신세계종합금에서 45 억원을 빌린 뒤 2 년이나 지난 뒤에야 원금의 1.7%만 갚았을 뿐 원금의 98.3%를 때먹어 버렸다 (Sunday Journal 2017).

유병언의 세모해운은 1997 년 한강유람선 사업 실패로 2000 억원대의 부도를 냈으나, 유병언은 신세계종합금에서 빌리고 갚지 않은 돈으로 1999 년 청해진해운을 설립하였는데, 김대중 정부 “해수부 산하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청해진해운이 세모 해운으로부터 인천~제주 면허를 살 수 있도록 승인했다” (조선일보 2014.04.24). 청해진해운이 인천~제주 항로를 20 년간 독점할 수 있게끔 해양수산부로부터 보장 받았을 무렵의 해양수산부 장관은 노무현이었다. 2016 년 4 월 16 일의 세월호 참사는 바로 이 항로에서 발생하였다.

노무현과 유병언과 문재인을 물고 물리는 관계이다. 노무현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00 년 7 월 14 일 문재인이 부산지방법원에 의해 유병언의 채권자 신세계종합금융회사 파산관재인 으로 선임되었다. 자칭 인권변호사 문재인은 인권변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짹짹한 수당을 챙기는 파산관재인이 되었다. 2002 년 10 월 8 일 신세계종합금이 유병언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냄에 따라 유병언으로부터 66 억 4 천만원 상당의 채권을 가집행으로 회수할 책임이 문재인 변호사에게 있었다. 즉, 법원은 문재인에게 유병언의 재산을 찾으려면 가압류하여 국가에 환수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것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다. 신세계종합금은 유병언에게 거액을 떼이고 파산하였는데, 금융회사가 파산할 때는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공적 자금은 국민

## 문재인과 전두환의 5·18 역사전쟁

혈세로 투입되었다. 그래서 국가가 신세계종금 파산에 투입한 공적 자금 일부를 회수하는 길은 유병언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이요, 그것을 이행할 책임과 권한이 문재인에게 부여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은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채 6달 후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으로 취임하였고, 문재인이 정무수석이 되자마자 2003년 3월에 유병언의 청해진해운은 일본 오시마 운수(현 마루에이 페리, 일본어: マルエーフェリー)사에서 14년간 사용하다가 퇴역시킨 폐선 오하마나호(MV Ohamana)를 인천~제주간을 운항하기 위해 들여왔다. 유병언 및 그의 일가 측근들은 바로 다섯 달 전에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문재인이 유병언의 재산을 가처분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마치 유병언은 문재인이 자기 재산을 건드리지 않을 것을 보장받았다는 듯이 일본에서 꽤 큰 배를 도입하여 그의 해운회사가 부도나기 전보다 오히려 더 크게 해운사업을 시작하였던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해양수산 정책은 해양수산부장관 출신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확실하게 직접 챙길 수 있는 정책이었다. 말하자면 유병언의 해운회사가 일본의 폐선을 도입해서 불법 개조한 것은 노무현 정부의 첫 정경유착이었다.

유병언은 문재인이 정무수석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문재인이 로펌이 자기가 일본에서 도입한 배를 가압류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안심하고 일본 배를 도입하였으며, 문재인도 지금은 그가 정무수석이기엔 더욱이나 유병언의 재산을 추적하여 공적 자금을 환수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단 한 푼도 가압류하지 않았다. 여기서 문재인이 입이 열 개 있어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은 유병언의 청해진해운이 일본에서 배를 사온 시기와 문재인이 정무수석 재임 기간이 맞물린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유병언의 채권자인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이었고, 신세계종금 파산에는 공적 자금, 즉 국민 혈세가 투입되었다. 따라서 국민 혈세 환수 업무를 수행하는 파산관재인은 사실상 정부 재산을 관리하는 것임에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기까지 문재인이 유병언의 재산을 단 한푼도 가집행하지 않은 것은 엄청난 정부 재산을 흥청망청 날려보낸

것과 마찬가지로였다.<sup>2</sup> 문재인이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으로서의 의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것은 단지 국고에서 거액이 낭비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한 단초가 되었다.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 원인은 과적이었다. 그런데 그 과적의 뿌리도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 노무현 대통령 정부 첫 달로 거슬러올라간다. 청해진해운이 일본에서 도입한 첫번째 폐선 오하마나호는 2003년 3월 대한민국에 취항할 당시 695명에서 35%가 증가한 937명으로 여객 정원이 늘었다. 화물수송 능력도 컨테이너 적재 한도가 109개에서 180개로 증가했다.

이 배가 2011년부터 엔진 고장이 나기 시작하자 2012년 10월 청해진해운이 일본에서 퇴역한 또 한 척의 배를 중고로 도입한 배가 바로 2014년 4월 16일 진도군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世越號, MV Sewol)였다. 노무현 정부의 허가로 일본 폐선을 도입하여 불법 개조하여 10년간 항해하여도 별 사고가 없자 그것이 하나의 관례가 되어 2012년 10월에 또 일본 폐선을 도입하여 불법 개조하였던 것이다.<sup>3</sup>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그 관례를 묵인하였지만 박근혜 정부는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 2013년 12월 17일에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는데, 해사안전의 사전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만 통과되었어도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인데 문재인 일당이 막았다.<sup>4</sup> 관련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2014년 2월 21일 의결되었지만 소관 부처의 법안심사를 담당하는 법사위로 넘어간 뒤 심의조차 되지 않았는데, 그때

<sup>2</sup> 문재인은 중간에 지병 치료를 위해 쉬었기 때문에 실제로 청와대에서 근무한 기간은 3년밖에 안 되었는데 공무원이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는지 퇴임하기 한 달 전에 양산에 호화주택이 생겼다.

<sup>3</sup> 제 18대 대선 기간을 틈타 세월호는 승선 정원이 804명에서 921명으로, 선박 무게가 6585톤에서 6825톤으로 증축 개수되었다.

<sup>4</sup>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목적] 민간의 자발적인 해사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해사안전관리의 체계를 현행 사후 지도·점검 체계에서 사전 예방적 관리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의 범위 및 안전진단서 제출시기를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제안.

법사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었다. 문재인과 박영선은 콤피였으므로 해상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이 시급한 법안 통과가 마냥 지연된 것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적반하장 격으로 세월호 참사를 가장 정치적으로 이용한 인물들이 문재인과 박영선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었다. 이처럼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통과되었어야 할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게 한 책임이 있는 문재인과 박영선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세월호 참사 당일 고급식당에서 해산 요리로 만찬을 열었다.

문재인이 정무수석이었을 때 노무현 정부가 인허하여 청해진해운이 일본에서 폐선을 도입하여 불법 개조한 여객선 오하마나호가 2011년 4월과 2013년 2월 두 차례 바다에서 엔진 고장으로 5시간 표류한 사건이 일어난 후 유병언이 또 한 척의 폐선을 도입하여 정권교체에 불법 개조한 후 세월호란 명칭을 붙여 2013년 3월에 출항시켰다. 문재인이 비서실장 퇴임 한 달 전에 유병언의 부채 1,900억원을 탕감해주는 조치가 있었기에 대형 여객선 한 척을 더 구입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해상 사고를 막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해사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통과에 누구보다도 문재인이 앞장서는 것이 도리였을 것이다. 그러나 법사위를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었고,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문재인이었으므로 당리당락을 내세우며 보이코트하면 박근혜 정부가 아무리 좋은 법안을 발의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유병언은 해운사업 등을 통해서 꾸준히 재산을 증식하면서도 채권자인 신세계종금에 채무 이행을 하지 않았다. 만약 노무현과 문재인에게 정말로 서민 편에 서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이렇게 일부 부도덕한 기업들이 법정관리를 악용하여 채무이행을 하지 않고 공적 자금 불랙홀이 생기게 하는 것을 단속하여야 했다. 그러나 문재인이 비서실장 시절 노무현 정부는 유병언에게 또 하나의 큰 선물을 주었다. 노무현 정부는 임기 만료 한 달 전에 세모그룹의 부채 1906억원을 탕감해 주었다. 그래서 세모그룹이 법정관리를 졸업하고 다시 원주인 유병언의 소유가 되었으며, 절묘하게도 같은 달 2008년 2월에 양산 호화주택이 문재인이 소유가 되었다.

세모그룹 같은 대기업의 빚을 탕감하고 회사를 회생시키는 것은 국가 경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법부 단독으로 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 살림을 위해 꼭 필요하여 4년간 사용하신 총 6억원의 특수활동비 때문에 6년의 징역형과 막대한 벌금을 선고받으셨고, 전직 국정원장 세 분이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면 그 317 배나 되는 1900억원을 사법부 단독으로 탕감할 수 없다. 만약 문재인이 노무현 정부 사법부가 단독으로 유병언의 부채를 탕감하여 주었다고 생각한다면 응당 문재인 정부가 그것을 조사하여야 하는데, 왜 안하고 있는가?

문재인은 유병언의 세모그룹이 부채를 탕감받은 것은 사법부 소관 이므로 자기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변명한다. 그렇다면 문재인은 사법부가 유병언의 채권 확보 책임자가 문재인과 문재인의 로펌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부산지방법원이 2002년 10월에 유병언과 유병언 일가와 유병언의 회사에 선고한 판결을 몰랐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인가? 유병언의 회사 재산 등 유병언의 재산을 가처분하라는 법원 판결이 있고, 또 유병언의 부채를 전부 탕감해 주면 국가 재정에 큰 손실을 끼치기 때문에 이것은 정권의 개입과 지시 없이 사법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문재인이 자신을 인권변호사로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1997년 연말에 발생한 IMF 환난을 기회로 문재인이 금융기관들의 파산관재인이 되었다. 1998년 4월부터 동남은행의 파산관재인이 된 문재인은 동남은행을 상대로 하는 13개 소송사건의 변호사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부산을 선임하여 주었는데, 그가 소송 사건 당사자 양편에서 파산관재인 수당과 수입료를 받아 챙겼다는 사실은 그가 변호사 직책을 이용해 얼마나 부도덕한 비즈니스를 하였는지를 보여준다 (Sunday Journal 2017).

세월호 참사 원인이 유병언의 세모그룹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이렇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사인이 자살인지 타살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가 받은 60억원의 뇌물의 비밀을 덮기 위한 죽음이었다. 그런데 문재인의 로펌이 받은 또 하나의 60억원의 뇌물의 비밀과 연결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이 있다. 양 사건 모두 노무현의 조카사위, 즉 노무현 정부 비선실세였던



## 문재인과 전두환의 5·18 역사전쟁

노무현의 형 노건평 씨의 사위들을 공동분모로 가지고 있다. 유병언이 노무현 정부로부터 부채 탕감의 특혜를 받은 바로 그 시기에 박연차가 노건평의 맏사위에게 5 백만 달러를 주었다. 문재인이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 근무하는 동안 받은 뇌물성 수입료 59 억원도 또 한 명의 노무현의 조카사위를 거쳐 전달되었다. 즉, 노무현 조카사위들이 노무현과 문재인 두 인물 모두의 경제공동체였으며, 노무현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노무현의 뇌물 수사가 노무현의 조카사위들에게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는 죽음이었다.

노무현과 문재인이 퇴임하기 한 달 전에 노무현 정부가 탕감해준 유병언의 세모그룹 부채 액수는 1,909 억원이며, 이것은 노무현이 받은 뇌물 60 억원의 32 배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거액이다. 김대중 정부는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인 잠재력이 있었던 효자 수출기업 대우그룹을 가차없이 해체하고, 김우중 회장의 전 재산까지 몰수한 것과 대조적으로 유병언의 세모그룹에는 특혜를 베풀어주다가 노무현 정부 때 부채를 모두 탕감해 주었다. 설사 엠앤드에이(M&A)를 위한 것이었다 해도 차기 정부로 넘기지 않고 노무현과 문재인 퇴임 한 달 전에 갑자기 진행하였으며, 세모그룹이 “빚을 모두 털고 말끔한 회사로 재탄생하자” 유병언은 측근 명의 회사들을 움직여 입찰에 참여하여 자산 규모 5600 억원의 세모를 373 억을 들여 사들였다 (리버티헤럴드 2014. 05. 13).

유병언 및 유병언의 측근 재산 가압류 권한을 2002 년 10 월에 파산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문재인은 유병언의 측근 명의의 회사들에 대한 정보를 숙지할 책임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 말기에 진행된 엠앤드에이는 사실상 세모그룹을 원주인 유병언에게 돌려주는 엠앤드 에이였다. 부도난 그룹의 부채를 국민 혈세로 탕감한 후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법정관리와 엠앤드에이? 그렇다면 때를 같이하여 양산 큰 저택 소유주 명의가 문재인으로 이전된 것이 묘한 우연의 일치였는가?

문재인이 입이 열개 있어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은 2007 년 부도 당시 총 부채액이 3673 억원이었던 유병언의 회사 세모가 법정관리 제도를 악용하여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치며 부채를 탕감 받고 법정관리를 졸업하고 원주인에게로 돌아간 때는 노무현 정부 시절, 그리고 문재인이

비서실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시절이라는 사실이다. 대통령도 비서실장도 법조인이라 유병언의 법정관리 제도 악용을 막아야 할 책임이 그 어느 정부보다도 컸을텐데 오히려 노무현 정부 시절에 법정관리 제도가 가장 악용되었다.

노무현 정부가 특혜와 공적자금으로 유병언이 재기하여 세모그룹 임자가 되게 해주니까 유병언 일가가 다시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하고, 세월호 운항으로 벌어드리는 수익을 끌어다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하는데 쓴 것이 세월호 참사 주원인이었을 것이다. 승객과 화물을 지나치게 과적한 청해진해운측의 과욕이 2014년 4월 16일에 진해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뒤집히는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었다.

그러면 문재인의 비서실장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유병언의 회사가 부채탕감을 받은 것이 문재인의 단순한 직무유기였는가 아니면 유병언 일가와 문재인 사이에 경제공동체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는가? 문재인은 최순실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면서 2016~2017년에 최순실의 이름을 거론하며 촛불집회를 선동하였다. 그러나 유병언이 세월호 선주이며, 유병언에게 세월호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알고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하였는가? 마치 유병언을 보호해 주려는 듯 단 한번도 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국민들은 문재인이 유병언의 채권 확보 책임자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문재인의 비서실장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유병언의 회사가 부채탕감을 받은 것이 문재인의 단순한 직무유기였는가 아니면 유병언 일가와 문재인 사이에 경제공동체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는가?” —이런 의문점에 대한 답변의 단서는 문재인이 청와대에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 등을 역임하던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그의 로펌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59억원의 뇌물성 수입료에 있다.

## 2. 금융비리사건에 연루된 문재인

문재인의 로펌인 법무법인 부산은 노무현과 문재인 두 명의 인권변호사와 노무현의 조카사위 정재성 등 총 세 명으로 구성된 로펌이었다. 이 로펌의 두 기둥은 유명한 인권변호사 노무현과 문재인이었는데, 이 두 기둥이 모두 2003년 2월 청와대로 갔으므로 기둥이 빠진 로펌이 되었다.

본 소책자 출처는 『[문재인과 전두환의 5·18 역사전쟁](#)』입니다.

[본서 전체를 Google Play 북에서 읽기](#)

# THE WAR OF 5.18 HISTORY IN SOUTH KOREA

THE WAR OF 5·18 HISTORY  
BETWEEN MOON JAE-IN  
AND CHUN DOO WHAN



DAERYEONG KIM